

민주 단독 예산안 野 “국민감세” vs 與 “발목잡기”

정부안서 대통령실 이전 등 2조원 감액... 합의 불발시 독자 표결 시사 국힘, 이상민 해임 건의안 정쟁화... ‘이태원 국조’ 보이콧 카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마련한 자체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에서 2조원 남짓 감액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감액분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민주당이 꼭 삭감하겠다고 한 분야의 감액분을 더한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서민 감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마련한 안에 수정을 지시한 만큼 이 감액 규모는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1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이미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부에 당이 마련한 자체 수정안 초안을 전달했고 총 감액 규모는 1조 7000억~2조 원이다.

민주당은 애초 내년 총지출(639조 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적용해 총 최대 7조 7000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 사업, 서민 임대주택 등 이른바 ‘민생예산’에 들어갈 예산을 늘리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증액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반드시 깎아야 하는 예산안 감액분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초부자감세’ 기조가 담긴 정부 원안을 부결시키고, 당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두 안의 차액만큼 세수가 늘게 된다. 이렇게 남은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채무 상환에 쓰도록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수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시한으로 못 박은 15일에 앞서 추가로 수정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전날 의

원총회에서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감세안을 추가로 만들어, 수정안의 내용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서 ‘서민 감세안’을 이번에 처리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팽팽한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오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날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이후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여야 협상의 여지는 더 좁아진 형국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요청한 ‘서민감세안’ 추가 검토에 나서는 등 기존 쟁점에 더해 전선은 더 넓어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 지도부 간 회동 등 공개 협상 없이 여론전에 열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반박하는 한편 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정쟁화하면서 예산 발목잡기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감세’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서민들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 법인세를 낮추면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2조원 안팎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국민 감세’라고 명명하고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 독자적으로 강행 표결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초부자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 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더는 물러

실 길이 없다”며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법인세를 비롯한 기존의 10여 개 쟁점에 대한 이

견도 좁혀지지 않는 상태. 다만 여야 모두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부담이 큰 만큼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은 채 거듭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이상직 지역구’ 전북 전주를 무공천

“당 규정·국민 눈높이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전북 전주를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횡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 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무공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규제가 지나치다는 당 일각의 지적에 따라 당헌·당규를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된 만큼 당헌을 엄격히 해석하면 전주를 지역구에 공천해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는 뜻으로 읽힌다.

당내에서는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무공천 규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 해당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었다.

민주당은 그러나 전 당원 투표로 당헌을 개정, ‘전 당원 투표로 탈락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후 두 곳에서 모두 후보를 공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지방의회 우수사례 장관상’

광주시의회, 3년 연속 수상

광주시의회가 ‘지방의회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을 했다.

광주시의회는 올해 열린 지방의회 우수 사례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신수정 광주시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정책 갑잡이가 될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를 비롯해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등 청소년 관련 4개 조례를 일괄 제정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광주시의회가 3년 연속 지방의회 우수조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의원들의 열성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 덕분이다”며 “우수 조례를 제정하는 활동을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사고자동차 수리 전 내역서 사전 제공 의무화

자동차 손해 사정 상생법 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 사정 상생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 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손해사정내역서를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리, 매매, 폐차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어려워 ‘소비자 선택권 제한’도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손해사정 내역서를 정비소와 차주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 지급에서 발생하는 보험사-정비업체간 분쟁과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와 정비소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안동, 상업용지

-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10층, 72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3억

대인동, 상업용지

- 롯데백화점 부근
- 대지 15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9층, 64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0억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 중 17층
- 계 14평, 전 9평
- 무등산 방향
- 일조권 전망최상
- 사무실 전용
- 매매 - 6100만원

덕남동, 임야

- 전대병원 부근
- 지분매매, 2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그린벨트, 도로접
- 개발호재 많음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6천만원

상담 및 문의. 010 - 4159 - 9700